

유럽 대륙법계 주요국의 사내변호사 비밀유지권(ACP) 제도 도입 사례 및 한국 입법 방안

1. 서론

최근 글로벌 기업환경에서 **준법경영(compliance)**과 기업윤리 강화가 사회적 요구가 되면서, 기업 내부에서 법률 자문을 수행하는 사내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사내변호사와 기업의 법률자문에 대해 구체적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 제도가 없다. 반면 미국·영국 등 영미법계에서는 오랜 전통으로 외부·사내변호사 구분 없이 의뢰인·변호사 간 비밀유지권이 보장되어 온 반면, 유럽 대륙법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사내변호사에 대한 특권 인정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EU를 중심으로 사내변호사에게도 일정한 보호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예를 들어, EU 집행규칙(Reg. 1/2003) 도입 이후 불공정거래 사건 등에서 내부조사 필요성이 커지자, 유럽 국가들은 제도화 논의를 진행해 왔다. 본 보고서는 유럽 주요 대륙법계 국가들의 사내변호사 ACP 제도 도입 사례와 법리적 구조를 검토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입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기존 문헌 검토

ACP(Attorney-Client Privilege) 또는 법률전문가 특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법률 자문 통신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는 개념이다. 영미법계에서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광범위하게 인정되며, 법정 심리 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교신 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로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유럽 대륙법계는 전통적으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법에 규정할 뿐, 의뢰인에게 특권으로 부여된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다 ¹. 특히 EU 경쟁법 조사에서 ACP 문제는 ECJ(유럽사법재판소)가 판단해 왔는데, **AM&S 판결(1983년)**에서 법원은 ACP 적용을 위해 두 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즉, (1) 해당 통신이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고, (2) 통신 상대가 독립적인 변호사(즉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변호사)여야 한다는 것이다 ². 이 판결은 사내변호사는 고용주 회사의 종업원으로 독립성이 부족하므로 ACP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³. 이후 Akzo Nobel 사건(2010년)에서 ECJ는 AM&S 판결을 재확인하며, 등록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사라지지 않는 한 독립성이 결여되어 사내변호사 통신에는 특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⁴. 또한 개정된 EU 경쟁법(Reg.1/2003) 도입으로 기업의 자체 준법감시(self-assessment) 의무가 강화되었으나, ECJ는 “EU 법체계 전반에 사내변호사 비밀유지권의 도입 추세가 우세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전향적 해석을 거부했다 ⁵ ⁶. 즉, 전통적 EU 사법부류는 사내변호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ACP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학계 및 법조계**에서는 대륙법 국가에서도 사내변호사 신뢰관계를 보호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국내 대한변호사 협회도 2019년 의뢰인·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였고, 입법안이 마련되었다 ⁷. 한국법제연구원 등에서는 ACP가 단순히 영미법계 특유의 제도가 아니라 기본권(사생활·비밀통신의 자유)과 연결된 권리라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⁸ ⁹. 또한 국제적으로는 **무결성·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내부고발·준법보고 활성화를 위해 사내변호사 자문에 대한 신뢰 보장도 강조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ACP는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 기업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가 강화된다는 점이 강조된다.

3. 국가별 사례 분석

- **독일**: 독일은 사내변호사에게 별도의 ACP를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독일 형사소송법(StPO) 제53조 개정(2015년)으로, 사내변호사(회사의 종업원 변호사)는 회사 관련 비밀에 대해 증언 거부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¹⁰. 즉, 수사기관 조사나 압수수색에서 사내변호사는 증언·자료제출 요구 대상이 된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특수한 경우에 사내변호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사내변호사가 독일 변호사 자격(바등록)을 갖춘 경우, 회사로부터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해당 문서도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 ¹⁰ ¹¹. 독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독립적이지 않은 사내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형사적 조사에서 증언해야 하지만, 민사

상 회사 방어를 위한 상황에서는 변호사 지위를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비밀유지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단 내부 간 커뮤니케이션의 경우에도, 바등록 사내변호사는 민사절차에서 변호사-변호사 간 정보(고용주 관련 조언)는 보호받을 수 있다 ¹¹.

• **프랑스**: 전통적으로 프랑스법은 사내변호사를 juriste d'entreprise로 분류하여, 이들은 전통적 avocat(외부 변호사)와 달리 바등록이 안 되며 **전문직 윤리규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¹². 따라서 사내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자문에 대해 비밀유지 특권이 원칙적으로 없었다 ¹³. 실제로 프랑스 대법원은 사내변호사의 내부 법률자문 문서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할 수 있고, 사내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¹⁴. 이로 인해 중요 법률의견서는 외부변호사에게 맡기는 관행이 있었다 ¹⁵. 그러나 **2023년 7월 10일** 프랑스 국회는 사내변호사 내부 자문에 한정된 비밀유지권을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¹⁶ ¹⁷. 새로 도입된 형법 제71조-58-1는 “사내변호사 또는 그 부서에 속한 자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제공한 법률자문은 기밀로 한다”고 명시한다 ¹⁶. 다만 적용범위는 민사·상업·행정소송에 한정하며 형사·조세 사건은 제외된다 ¹⁸. 그리고 사내변호사 자격요건으로 법학석사(또는 동등학위) 및 전문윤리교육 이수 등이 요구되며, 조언 문서에는 “confidentiel – consultation juridique juriste d'entreprise”로 표시해야 한다 ¹⁸.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규정도 두었다 ¹⁹. 이처럼 프랑스는 사내변호사 ACP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세계적 추세에 합류하였으나, 엄격한 요건(학력·표시·관계자 범위)과 형사·조세 분야 제외 등 제약을 뒀다.

•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2000년대 중반부터 **바등록 사내변호사**에게 ACP를 인정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국내법(변호사법)상 두 종류의 사내변호사(등록/미등록)를 구분하여, **바에 등록된 사내변호사(so-called advocaat in dienst van [회사])**는 외부변호사와 동일하게 특권을 누릴 수 있다 ²⁰. 다만 이를 위해서는 **독립성 확보 서약(professioneel statuut)**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²¹. 즉, 회사에 고용된 변호사라도 독립성을 보장하는 전문직 규약에 동의하면, 회사에 제공한 법률자문은 외부변호사와 같은 비밀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바등록이 아닌 사내변호사는 특권이 없고, 그들의 조언은 공개 가능하다 ²². 특권의 범위는 “사내변호사로서 얻은 정보에 한정”되며, 특히 진행 중이거나 예견된 법률절차와 관련된 자문에 적용된다 ²³. 다만 네덜란드 대법원은 EU 경쟁법 사건에서는 ECJ 판례를 따르기로 하여, 카르텔 조사 등 EU 집행위의 경쟁법 수사에서는 사내변호사에게 ACP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²⁴. 내부 인하우스 변호사들 간 통신도, 적어도 한 명이 바등록된 경우 민사적 맥락에서는 보호되나 경쟁법 범위에서는 제외된다 ²⁵. 외국 변호사의 경우, 자국에서 특권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자국법에 따른 절차(전문직 규약 등)를 충족하면 네덜란드에서도 특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²⁶.

• **벨기에**: 벨기에는 2000년 ‘사내법률고문 연구소(Institut du Juriste d'Entreprise)’ 설립법(2000.3.1. 法)으로, 해당 연구소 회원에게 내부 자문에 대한 일종의 비밀유지권을 부여했다 ²⁷. 그러나 그 법적 효력과 범위는 초기에는 논란이 많았다. 2013년 브뤼셀 항소법원은 벨기에 경쟁법상 조사에서 연구소 회원인 사내변호사가 고용주에게 제공한 법률자문(요청서·관련서신·준비자료 포함)에 대해, 유럽인권협약 제8조(사생활)와 EU 기본권장전의 비밀통신 보호를 근거로 외부변호사에 준하는 비밀보호를 인정했다 ²⁸. 이에 벨기에 대법원은 경쟁당국의 항소를 기각(2015년)하며, “사내변호사(연구소 회원)가 고용주에게 제공한 법률자문은 벨기에 국내조사에서 특권이 적용되나, EU 집행위 조사(아크조 판결)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확립했다 ²⁹. 즉 벨기에도 자격요건으로 연구소 회원 자격이 필수이며, 보호대상은 오로지 고용주에게 준 법률자문(第三者 대상 아님)으로 한정된다 ³⁰. 또한 문서가 외부에 유출되면 비밀보호를 상실하며, 자문 내용이 경영·실무 등 비법률적 영역에 관한 것일 경우 보호받지 못한다. 종합하면 벨기에는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나, 대상은 연구소 소속자 및 고용주 관련 법률자문에 한정되며, EU 카르텔 등 특수 절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스위스**: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독립 개업 변호사만** 전문비밀로부터 보호받았으며, 기업의 사내변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³¹. 그러나 2025년 1월 시행된 민사소송법(CP) 개정으로 **새로운 사내변호사 비밀유지권(CPC 제 167a조)**이 도입되었다. 개정법은 스위스 내·외 기업 및 그 법무부서 구성원이 “사내법무부서 업무 관련 문서 제출·협조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³². 다만 형사·행정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³². 이 특권을 누리려면 세 가지 요건(누적)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회사는 **스위스 상업등기부에 등록된 법인(국내외 포함)**이어야 한다 ³³. 둘째, 해당 법무부서장(또는 책임자)이 **스위스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본국에서 변호사 개업자격이 있어야 한다 ³⁴. 셋째, 보호받는 활동은 “법무업무에 전형적으로 속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즉 법률자문, 소송대리, 법률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에 관여한 경우로, 재무관리·영업 등 비전형적 업무는 제외된다 ³⁵.

회사 내에서 문서를 구분·관리하여 전형적 활동 관련 자료만 특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 개정으로 스위스는 명문화된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세계 최초의 대륙법계 국가가 되었다.

각국 사례를 종합하면, 유럽 대륙법계에서도 점차 사내변호사 ACP 도입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독일은 사실상 부재이나, 나머지 국가는 일정 조건하에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프랑스·스위스는 최근 법제화했고, 네덜란드·벨기에는 기존 바 등록 제도나 협회 기반으로 특권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형사절차·경쟁법 집행 등에서 예외를 두고**, 사내변호사 자격과 독립성 확보, 자문 표시 등 엄격한 요건을 부여하고 있다. 아래 표는 주요국 비교 요약이다.

국 가	법적 근거 및 판례	대상 및 자격 조건	보호 범위/요 건	제한·예외
독 일	바등록 변호사만 증언거부(민사), 형사절차에 사내변호사 거부권 없음 ¹⁰	바등록된 사내변호사 여부	민사소송에서만 (증언거부·문서비공개 가능)	형사절차: 사내변호사 특권 불인정 (제 53조 적용) ¹⁰
프 랑 스	Loi 71-1130(1971) 개정 (2023) ¹⁶	학사(법무) 이상·윤리 교육 이수·‘비밀’ 표시 필요 ¹⁷	민·상·행정 소송 문서(사내 법률조언)	형사·세무 사건 제외 ¹⁸ (경찰/검찰 조사 배제)
네 덜 란 드	변호사법 및 전문규약(2005 Cohen 판결) ²⁰	바등록된 사내변호사 + 독립성 서약(Professioneel Statuut) ²¹	고용주를 위한 법률조언, 서면/구두 모두	EU 카르텔 조사 제외 ²⁴ (EU경쟁법 면제)
벨 기 에	2000년 Act·사내변호사연구소, 2015 최고법원 판례 ²⁹	연구소 회원(인정 사내변호사)만 대상	회사에 대한 법률자문(서신·준비서류 포함)	EU경쟁법(Akzo) 적용제외 ²⁹ , 외부 공개 시 상실
스 위 스	민사소송법 Art.167a (2025 시행) ³⁶	상업등기 등록회사 + 법무부 서장(스위스 변호사 자격) ³³	전형적 법률 사무(자문·소송·계약서 작성)	형사·행정절차 제외 ³² (위반시 소환·압수 가능)

4. 실무적 분석

각 국가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내변호사의 자격 요건은 **전문 법률자격** 소지이다. 프랑스는 석사 이상의 법학 학위를 요구하고 ¹⁷, 네덜란드·스위스는 변호사 자격증을 필수로 한다 ²¹ ³⁴. 벨기에는 사내변호사연구소 회원 자격이 되어야 하는데, 이 연구소는 자문역량과 비밀유지 의무를 충족한 법률가를 선별한다. 이처럼 각국은 사내변호사를 외부변호사와 동등하게 인정하기 위해 **공통된 전문자질 확보**를 중요시한다.

또한 ACP 적용을 위해서는 **보호 대상의 범위와 표시 요건**이 세부화된다. 프랑스 법은 사내 변호사 자문서에 ‘비밀 (confidentiel)’, ‘사내변호사 자문’ 등의 표기를 요구하여 해당 문서임을 명시한다 ¹⁷. 스위스도 법무부서 문서는 별도 분류·보관토록 하여 전형적 법률업무 관련임을 구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³⁵. 네덜란드는 서면뿐 아니라 구두·전자 메일도 보호되나, 반드시 변호사가 ‘법률 상담’의 일환으로 작성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보호되는 내용은 **법률자문과 관련된 의사소통**으로 한정되며, 단순 사실확인이나 경영 전략 자문은 제외된다. 즉, 사내변호사가 회사 운영·관리 업무를 넘어서 순수 법률조언을 제공한 결과에 대해서만 특권이 인정된다.

제한·예외 조건도 국가별로 구체적이다. 대부분 국가가 범죄수사나 공공이익 등 **예외규정**을 둔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스위스는 형사·조세 사건에서는 사내변호사 ACP를 부인하고 있다 ¹⁸ ³². 벨기에는 EU 집행위의 카르텔 조사처럼 경쟁법상의 절차를 제외시켰다 ²⁹. 또한 프랑스는 사내변호사에 “법률윤리교육 이수” 등 양심 준수 장치를 부과하고, 허

위 ‘비밀’ 표시 시 처벌 규정을 두었다¹⁷. 이처럼 실무적으로는 ACP 악용 방지와 기업의 준법 의지를 균형 맞추기 위해 엄격한 요건과 제재장치를 병행하고 있다.

국가별 사례에서 실제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사내변호사는 내부문건을 작성할 때 위 요건을 충족하도록 협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대기업은 ‘confidentiel’ 표시가 있는 자문서를 내부 경영진 회의에 보고하며, 필요 시 법원에 특권 적용을 주장할 준비를 한다. 네덜란드 기업들은 사내변호사가 독립성 서약을 이행하고, 통신 분리 체계를 유지하여 특권 적용 요건을 관리한다. 아직 자료가 제한적이나, 이들 국가에서는 대체로 회사의 준법 자문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ACP가 적시에 활용되고 있다.

5. 도입 효과 분석

ACP 도입이 가져오는 효과로는 크게 **준법경영 강화, 리스크 관리, 국제경쟁력 제고**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사내변호사에게 비밀유지권이 보장되면 임직원은 회사의 규정 위반 또는 잠재적 불법행위에 대해 자유롭게 내부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문제조기발견 및 시정으로 이어져 조직 전체의 법 준수문화가 강화된다. 반대로 현재는 사정당국이 내부 자문서류를 압수함으로써 기업이 법률자문을 기피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사내변호사회 김성한 회장은 “기업에서 준법경영 강화를 위해 사내변호사 조인을 중요시하지만,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자문서류를 최우선 표적으로 삼고 있어 기업의 준법 의지를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³⁷. ACP가 도입되면 기업은 형사·행정조사 시에도 내부 법률의견을 비공개로 유지함으로써 전략적 대응이 가능해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준법경영을 촉진한다.

둘째, ACP는 **법적 위험관리(Legal Risk Management)** 측면에서도 유용하다. 기업은 자체 조사 결과를 법정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내변호사가 개입한 사건을 비밀보장 없이 다룰 경우 기업과 임직원이 형사처벌 또는 민·형사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 ACP는 이 같은 법적 노출을 일부 완화해 주어, 기업이 적극적으로 내부 감사를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글로벌 경쟁력 제고** 효과가 크다. 유럽·미국·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서는 이미 ACP가 도입되어 있거나 논의 중이어서, 사내변호사 보호체계가 없는 기업은 해외거래·소송에서 경쟁열위에 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위스 분석에 따르면 스위스 기업이 미국 등지의 소송에서 사내법무자료를 보호하지 못해 불리했던 사례가 많았고, 이에 입법을 통해 사내변호사 비밀유지를 마련하지 않으면 국제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³⁸. 따라서 한국 기업도 ACP를 통해 해외 투자·합작·소송 리스크를 줄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

6. 대한민국 입법 제안

한국에 ACP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륙법계 현실을 고려한 제도 모델**이 필요하다. 주요 선택지로는 (1) **독일식**처럼 원칙적 부인하되 예외를 둔 형태, (2) **네덜란드·스위스식**처럼 조건부 인정하는 입법, (3) **프랑스·일본식** 특별법 조항 도입 등이 있다. 본 보고서는 네덜란드·스위스의 접근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한다. 즉, 사내변호사의 전문성(변호사 자격)과 독립성 확보(예: 독립성 서약) 등을 전제로, 법률자문 행위에 한해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되 형사·공익 조사는 예외로 하는 모델이다. 이를 위해 제안되는 입법 방향과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법적 틀 정비**: 「변호사법」 제26조(비밀누설금지 의무) 등에 사내변호사 특권 조항을 신설한다. 예를 들어 ‘제26조의2(사내변호사 비밀유지권)’로 “회사의 사내변호사가 그 법률적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제공하는 법률자문은 회사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비밀로 보호된다”는 규정 등을 도입할 수 있다. 이미 대한변협은 2019년 조웅천 의원 발의로 유사한 개정안을 준비한 바 있다⁷. 법률 초안에는 보호 대상(회사·사내변호사 간 법률자문 자료), 요건(변호사 자격 소지, 내부 문서 표시 등), 범위(민사·행정법위, 형사·조세 제외) 등을 구체화한다.
2. **관련 법령 정비**: 필요시 「검찰청법」·「경찰관직무집행법」 등 수사절차법도 개정하여, 압수수색·증거제출 과정에서 법원의 사전심사 등 장치를 마련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법처럼 영장 발부 전 **비밀유지권 주장 심의기구**(Juge de la liberté et de la détention)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3. **자격 기준 마련:** 변호사법 하위규정에 사내변호사의 정의 및 교육요건(예: 윤리교육 이수) 등을 명시하고, 변호사협회 또는 법무부가 사내변호사 등록제도를 운영토록 한다. 네덜란드는 바 등록 + 서약이 독립성 요건이었는데 ²¹, 한국도 협회가 독립성 규약을 마련할 수 있다.

4. **학습·홍보 단계:** 법제도 도입 전후로 기업·사내법무부서 대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사내변호사 ACP의 대상 범위와 방법을 교육한다. 사내변호사들이 내부 문서에 비밀표시를 다는 등 실무준비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5. **이행 관리 로드맵:** 도입 후 초기 1~2년간은 시범 적용 및 문제점 보완 기간으로 설정한다. 예를 들어 국립중앙도서관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법무부·검찰이 공동으로 설명회를 열어 조정방안을 마련한다.

반대 논리 대응 방안: ACP 도입에 반대하는 주요 논리는 “범죄 은폐 및 수사 방해”이다. 그러나 위 논의에서 보듯, 대부분 유럽국가들도 형사·공익 목적의 수사·조사는 예외로 두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있다. 또한 ACP는 절대 비밀이 아니라 통상적인 증거개시 절차와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과 같이 필요시 법원이 판결로 특권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오남용 시 벌칙을 두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핵심은 **법무자문 본연의 기능 보호와 공익수사 기능** 사이의 균형이다.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ACP 도입 시 투명성 제고와 기업준법강화라는 장점이 무시할 수 없다. 특히 김성한 회장이 지적했듯 “수사기관의 자문서류 수집이 기업의 준법경영 의지를 꺾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³⁷, ACP를 통해 내부 자문의 효율을 높이고 사법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7. 결론

사내변호사 ACP 제도의 도입은 기업의 준법문화와 법률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대한 과제이다. 유럽 대륙법계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법제화 기초**는 유사하나 각국의 법적·문화적 차이를 반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다. 독일·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스위스 등은 이미 사내변호사 보호를 법제나 판례로 명확히 하였고, 특히 최근 프랑스와 스위스는 사내변호사 ACP를 법제화하였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동향과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요구를 고려하여, 사내변호사 제도에 ACP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외국 사례들은 모두 **제한적 적용과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한국의 현실에 맞게 적절히 수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형사·조세 분야 제외, 문서 표시·교육 등 요건을 부과한다면, 기업도 공권력도 양측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밀유지권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상기 사례들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입법안을 준비하고, 사법부·수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균형 있는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책적 시사점: ACP 도입은 단순한 법률용어 규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기업 내부의 법률적 소통을 신뢰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준법경영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무대에서의 소송 대응력도 강화할 수 있다. 나아가 기업과 법조계가 서로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법치주의 구현에도 기여할 것이다. 입법 작업은 복잡하겠지만, 외국의 검증된 입법례를 참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국내에서도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하다.

참고문헌 (APA)

- Baker & McKenzie. (2025). Global Attorney-Client Privilege Guide: Germany – Scope of privilege. Resource Hub.
- Baker & McKenzie. (2025). Global Attorney-Client Privilege Guide: France – Scope of privilege. Resource Hub.
- Baker & McKenzie. (2025). Global Attorney-Client Privilege Guide: Netherlands – Scope of privilege. Resource Hub.
- Baker & McKenzie. (2025). Global Attorney-Client Privilege Guide: Belgium – Scope of privilege. Resource Hub.
- WilmerHale. (2010, September 15). No legal privilege in EU competition law investigations for in-house lawyers: The ECJ’s Akzo Nobel Judgment.
- Reed Smith LLP. (2023, July 21). French legal privilege for in-house counsel: a welcome legal (r)evolution. Reed Smith Perspectives.
- Charles Russell Speechlys. (2025, March 3). New “In-House Counsel Privilege” in Swiss law.

- 김성한. (2022, June 28). 준법경영이 기업 경쟁력, 사내변호사 역할 강화될 것 [Interview]. 뉴데일리. (관련 언급) 37 .
- 대한변호사협회. (2019). 변호사 비밀유지권 침해 피해사례 실태조사 보고서. (입법발의 내용) 7 .

1 7 8 9

<5BBCF6BDC3BFACB1B8B0FAC1A628C0CEBCE2BFEB295D20BAAFC8A3BBE7BFCD20C0C7B7DAC0CE20B0A320BAF1B9D0C0A
https://www.kicj.kr/boardDownload.es?bid=0029&list_no=12650&seq=1

2 3 4 5 6 No legal privilege in EU competition law investigations for in-house lawyers: The ECJ's Akzo Nobel Judgment

<https://www.wilmerhale.com/en/insights/publications/no-legal-privilege-in-eu-competition-law-investigations-for-in-house-lawyers-the-ecjs-akzo-nobel-judgment-september-15-2010>

10 11 03 - Scope of privilege | Germany | Global Attorney-Client Privilege Guide | Baker McKenzie Resource Hub

<https://resourcehub.bakermckenzie.com/en/resources/global-attorney-client-privilege-guide/europe-middle-east--africa/germany/topics/03---scope-of-privilege>

12 13 14 15 03 - Scope of privilege | France | Global Attorney-Client Privilege Guide | Baker McKenzie Resource Hub

<https://resourcehub.bakermckenzie.com/en/resources/global-attorney-client-privilege-guide/europe-middle-east--africa/france/topics/03---scope-of-privilege>

16 17 18 19 French legal privilege for in-house counsel: a welcome legal (r)evolution | Perspectives | Reed Smith LLP

<https://www.reedsmith.com/en/perspectives/2023/07/french-legal-privilege-for-in-house-counsel-a-welcome-legal-revolution>

20 21 22 23 24 25 26 03 - Scope of privilege | Netherlands | Global Attorney-Client Privilege Guide | Baker McKenzie Resource Hub

<https://resourcehub.bakermckenzie.com/en/resources/global-attorney-client-privilege-guide/europe-middle-east--africa/the-netherlands/topics/03---scope-of-privilege>

27 28 29 30 03 - Scope of privilege | Belgium | Global Attorney-Client Privilege Guide | Baker McKenzie Resource Hub

<https://resourcehub.bakermckenzie.com/en/resources/global-attorney-client-privilege-guide/europe-middle-east--africa/belgium/topics/03---scope-of-privilege>

31 32 33 34 35 36 38 New "In-House Counsel Privilege" in Swiss law

<https://www.charlesrussellspeechlys.com/en/insights/expert-insights/dispute-resolution/2025/new-in-house-counsel-privilege-in-swiss-law/>

37 [인터뷰] 김성한 한사회 회장 "준법경영이 기업 경쟁력, 사내변호사 역할 강화될 것" | Save Internet 뉴데일리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2/06/28/2022062800044.html>